전두환 재판 지연·민간공원 의혹 수사 주요 쟁점

■ 오늘 광주 지·고법, 지·고검 국정감사

위원들 전씨 재판 자료 집중 요청

특례사업 압수수색 배경 등 질의

'법조통' 박지원 의원 '입' 주목

8일 대전고검과 대전고법에서 열리는 광주지검·고검, 광주지법·고법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전두환씨의 사자명예훼손 혐의 재판과 광주민간공원 특례사업 의혹 수사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7일 광주지검·고검, 광주지법·고법 등에 따르면 8일 오전 10시부터 대전고법에서 광주지법·고법, 광주가정법원, 전주지법, 제주지법 등이, 이날 오후 2시부터는 대전고검에서 광주지검·고검, 전주지검, 제주지검 등이 국정감사를 받을 예정이다.

국회법제사법위원들은 국정감사에 앞서 각 기관별 주요 사건 현황과 전두환씨 재판 기록 등에 대한 자료를 집중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이번 국감에선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전씨에 대한 더딘 재판 진행 등이 주요 현안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고(故) 조비오 신부의 '5·18 헬기 사격' 증언을 비판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88)씨의 재판이 1년 넘게 이어지고 있으며, 1심 재판은 올해를 넘겨서야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씨는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조 신부에 대해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불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전씨 재판은 전씨가 지난 3월 광주법정에 처음으로 출석한 이후 6차례에 걸쳐 헬기사격 목격자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어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변호인측 증인신청과 증거조사, 현장검증 등의 재판 절차가 산적해 있다. 이 때문에 전씨에 대한 1심 재판은 빠르면 내년 상반기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씨 재판과 함께 최근 광주시청과 정종제 광주시 부시장 등의 자택까지 압수수색한 광주지검의 광주민간공원 2단계 특례사업 비리 의혹 수사도 이번 국감의 주요 관심 사안이다. 광주지검은 지난달 5일 광주시청을, 27일에는 광주도시공사와 정종제 광주시행정부시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민간공원특례 사업에 대한 공무원 등의 개입 혐의를 잡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지난 4월 광주민간공원 2단계 특례사업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비리 의혹이 있다는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고발장을 접수받은 뒤 고발된 공무원과 업무 관계자들을 공무상 비밀 누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일부 공무원에 대해선 상당 부분 범죄 혐의를 입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감 의원들은 압수수색 배경 등에 대해 질문을 이어갈 예정이지만, 수사 중인 민감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검찰로부터 공개적인 설명은 듣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국감의 또 다른 관전 포인트는 대안정치연대(대안정치)소속 박지원 의원의 '입'이다. 국회 대표 '법조통'이자 달변가인 박 의원은 매 국감 때마다 날카로운 지적과 함께 따뜻한 격려를 쏟아내는 등 냉·온탕을 오가는 해박한 지식을 선보이며, '국감스타'로 활약해 왔기 때문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조국을 지지한다, 검찰 개혁 완수하라!"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2019 작가 선언에 참석한 황석영 작가(가운데)와 시인들이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연합뉴스

황석영·안도현 등 작가 1276명 "조국 지지, 검찰개혁 완수" 성명

소설가 황석영, 시인 안도현 등 작가 1276명이 7일 조국 법무부 장관을 지지하고 검찰 개혁의 완수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조국을 지지한다, 검찰 개혁 완수하라'란 제목의 성명서를 낭독하고 "블랙리스트의 악몽이 아직도 생생한데 다시 자의적인 공권력의 폭주가 시작되는 것을 보고 불안과 분노를 함께 느낀다"며 "검찰 개혁은 시대적 과제이자 촛불 민심의 명령이란 점을 확인하기 위해 서명에 나섰다"고 밝혔다.

작가들은 성명에서 "현재 통제받지 않고 있는 검찰 권력이 휘두르는 칼날은 군부 독재 시절 총칼보다도 더 공포스럽다"며 "그동안 문재인 정부와 조국 장관이 역설한 검찰 개혁의 첫걸음을 떼기도 전에 주저앉혀버리고 말겠다는 검찰의 살기가 대한민국 전체를 뒤덮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 검찰은 마음만 먹으면 어떤 '블랙리스트'도 자신들 의사대로 만들 수 있다"며 "자신들에게 잠재적 위험이 될 것 같은 조국 섬멸을 위해, 대통령과 국회도 무시하는 검찰의 칼끝은 결국 우리 공동체를 위협하는 가장 무서운 칼날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언론에 대해서도 "이번 사태를 통해 우리는 권력 하이에나나 다름없는 대한민국 언론의 민낯을 여과 없이 보게 되었다"며 "'조국의 진실'을 밝힌다는 미명 하에 '조국(祖國)'을 병들게 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이어 "우리는 촛불 혁명 과정을 통해 스스로 각성하였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와 이 나라를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는지 스스로 확인한 국민들"이라며 "자신들의 밥그릇 지키기에 혈안이 되어 온 나라를 혼란의 구렁텅이로 몰고 들어가려 획책은 더 통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소설가 황석영은 성명서 낭독이 끝난 후 취재진을 만나 최근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서 열린 촛불집회에 참석한 사실을 언급하며 "굉장히 감동적이었고, 각계 각층의 다양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이번에 검찰이 변해야 한다는 강력한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문 대통령 지지도 44.4%…취임 후 최저치 경신

리얼미터…중도층·20대·TK 하락

당지지율은 민주 38%·한국 33%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정지지도가 취임 후 최저치를 경신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7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2일, 4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2007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2%포인트)한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긍정평가)는 전주보다 2.9%포인트 내린 44.4%(매우잘함 26.5%·잘하는 편 17.9%)를 기록했다.

이는 리얼미터 조사 기준으로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최저치다. 이전 국정수행 지지도 최저치는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인 올해 3월 2주차에 기록했던 44.9%였다.

국정수행 부정평가는 2.1%포인트 오른 52.3%(매우 잘못함 40.6%, 잘못하는 편 11.7%)로, 이 역시 취임 후 기존 최고치(9월 3주차, 52.0%)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의 격차는 오차범위 밖인 7.9%포인트로 벌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0.8%포인트 늘어난 3.3%로 나타났다.

리얼미터는 이 같은 문 대통령의 국정지지도 하락세에 대해 "조국 법무부 장관과 검찰 개혁을 둘러싼 여야 진영간 대립 격화, 보수 진영의 개천절 장외집회, 어려운 민생·경제 관련 보도 등이 중첩된 데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국정지지도는 20대(49.5%→41.7%), 50대(43.9%→40.6%), 60대 이상(33.1%→30.3%), 대구·경북(40.8%→29.8%)과 부산·울산·경남(38.5%→34.8%), 호남(68.3%→65.2%), 서울(46.2%→44.2%) 등 등 대부분의 연령층과 지역에서 하락한 가운데 30대(57.4%→58.5%)에서는 소폭 올랐다.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이 1.9%포인트 내린 38.3%였다. 자유한국당은 2.7%포인트 오른 33.2%, 바른미래당은 0.8%포인트 오른 5.9%였다. 정의당은 0.9%포인트 하락한 4.9%, 민주평화당은 0.7%포인트 내린 1.2%를 각각 기록했다. 무당층은 0.6%포인트 내린 13.3%였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 "국론분열 아니다…국민 뜻은 검찰개혁 절실하다는 것"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정치적 의견의 차이나 활발한 토론 차원을 넘어서서 깊은 대립의 골로 빠져들거나 모든 정치가 거기에 매몰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최근 표출된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엄중한 마음으로 들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많은 국민께서 의견을 표현하셨고 온 사회가 경청하는 시간도 가진 만큼 이제 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정치적 사안에 대해 국민 의견이 나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로, 이를 국론 분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특히 대의정치가 충분히 민의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생각이 들 때 국민이 직접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직접 민주주의 행위로서 긍정적 측면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는 최근 검찰 개혁과 조국 법무부 장관의 거취 등을 둘러싸고 열리고 있는 대규모 집회에 대한 언급으로, 국민의 의견 표출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지만 도가 지나쳐 보혁 대립 양상으로 비치는 데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정치권에서도 산적한 국정과 민생 전반을 함께 살펴달라는 당부 말씀을 드린다"며 "다양한 의견 속에서도 하나로 모이는 국민 뜻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 보장 못지않게 검찰 개혁이 시급하고 절실하다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7일 태풍 '미탁'으로 인한 피해를 본 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서둘러 정부의 지원이 조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사태와 관련, 살처분·이동제한 등 정부의 방역대책에 적극 협력하며 고통을 감내하는 축산농민들께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전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